

弘報室 : (02)
6050-3603~5

* 이 자료는 12/29(火)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2/28(月) 11:00부터

※ 문의 : 규제혁신팀 김태연 팀장(02-6050-3981), 정범식 과장(02-6050-3982), 김종찬 과장(02-6050-3983)

기업만족도 1위 ‘강원영월’, 객관적 기업환경 1위 ‘전북남원’

- 대한상의 ‘2015년 전국규제지도’ 공개.. 지자체간 규제개선경쟁 치열
- 작년 최하위지역 올해엔 개선도1위 : 강원고성(체감도) 140위↑, 충남부여(친화성) 210위↑
- 공장설립친화지역(S·A등급) 71→121개, 음식점창업 150→173개, 다가구주택신축 69→96개
- 올해 추가된 5개분야 1위 : 경기부천 등 3개(산업단지), 전북남원 등 2개(유통물류), 서울중구 등 6개(환경), 전북남원 등 76개(공공수주·납품), 대전대덕 등 5개(부담금)

■ 전국규제지도 종합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만족도가 1위인 지역은 강원영월군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1위인 지역은 전북남원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9일 전국 8,600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로 평가한 ‘기업체감도’와 공장설립 등 11개 부문의 조례 등을 비교분석해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을 집계해 228개 기초지자체¹⁾별 순위와 등급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2015년 전국규제지도’를 작성, 공개했다.

전국규제지도는 지난해 3월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규제자 시각에서 지역별 규제상황을 평가해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데 따라 대한상의가 지난해말 작성·발표한 바 있다.

이번 2015년도 전국규제지도는 기업체감도의 경우 조사대상기업을 2014년 6,200개에서 8,600개로,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은 비교분야를 6개(공장설립 등)에서 총 11개 분야(산업단지 등 5개 추가)로 각각 확대해 작성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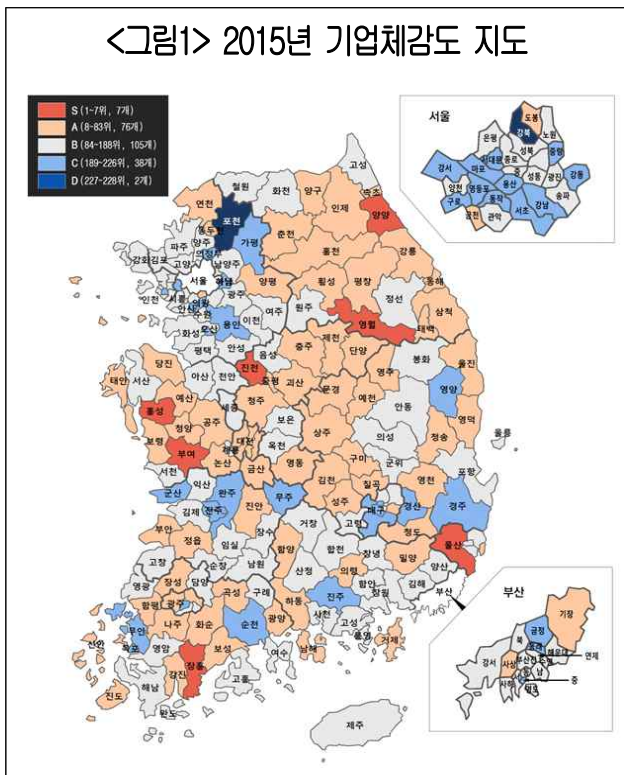
1)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

전국규제지도는 전체를 5개 평가등급(S-A-B-C-D)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 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그려졌으며, 지역별 기업환경의 변화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평가등급별 기준은 지난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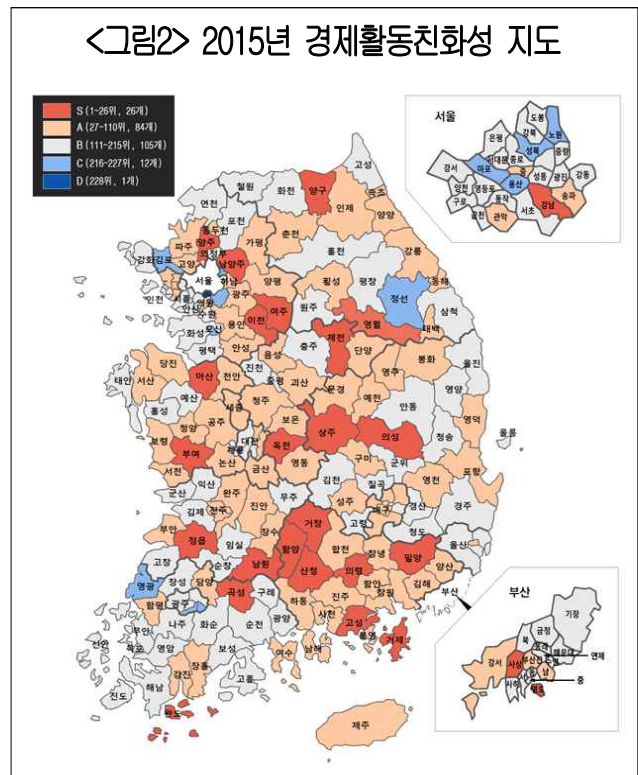
<표1> 2015년 전국규제지도 결과종합

구 분		1위 지역	우수지역 현황(S+A)			
			2015년		2014년	
			S+A	(S등급)	S+A	(S등급)
• 기업체감도 조사		강원영월	83개	(7개)	72개	(14개)
• 경제활동친화성 분석		전북남원	110개	(26개)	68개	(11개)
기존 분야	①공장설립	강원영월, 강원태백	121개	(53개)	71개	(17개)
	②일반음식점 창업	서울강남, 경기이천 등(42개)	173개	(46개)	150개	(14개)
	③다가구주택 신축	경기여주, 충남부여 등(33개)	96개	(33개)	69개	(16개)
	④중소기업 창업지원	경북상주, 경남김해 등(6개)	155개	(49개)	72개	(11개)
	⑤기업유치 지원	경기남양주, 충남아산 등(11개)	173개	(90개)	71개	(11개)
	⑥행정소송승소율 등	전남완도, 경남산청	160개	(69개)	70개	(12개)
신규 분야	⑦산업단지	경기부천, 경기광주, 경기가평	55개	(10개)	-	
	⑧유통물류	전북남원, 경남의령	68개	(13개)		
	⑨환경규제	부산연제구, 서울중구 등(6개)	115개	(17개)		
	⑩공공수주납품	전북남원, 경남고성 등(76개)	76개	(76개)		
	⑪부담금	대전대덕구, 대전유성구 등(5개)	71개	(15개)		

<그림1> 2015년 기업체감도 지도



<그림2> 2015년 경제활동친화성 지도



1위는 밀착지원 ‘강원영월’... 지난해 최하위 ‘강원고성’ 올해엔 개선도 1위

올해 기업체감도는 평균 69.9점으로 지난해보다 0.6점 높아졌으며, 항목별로도 ‘행정시스템(+0.7점)’과 ‘공무원태도(+0.6점)’ 등이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되었다.

〈표2〉 부문별 기업체감도 변화

구분	종합평가	항목별 점수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태도	규제개선인지
2015년	69.9점	69.6점	69.5점	69.9점	72.9점	70.2점
2014년	69.3점	69.2점	68.8점	69.4점	72.3점	69.9점
증감	+0.6	+0.4	+0.7	+0.5	+0.6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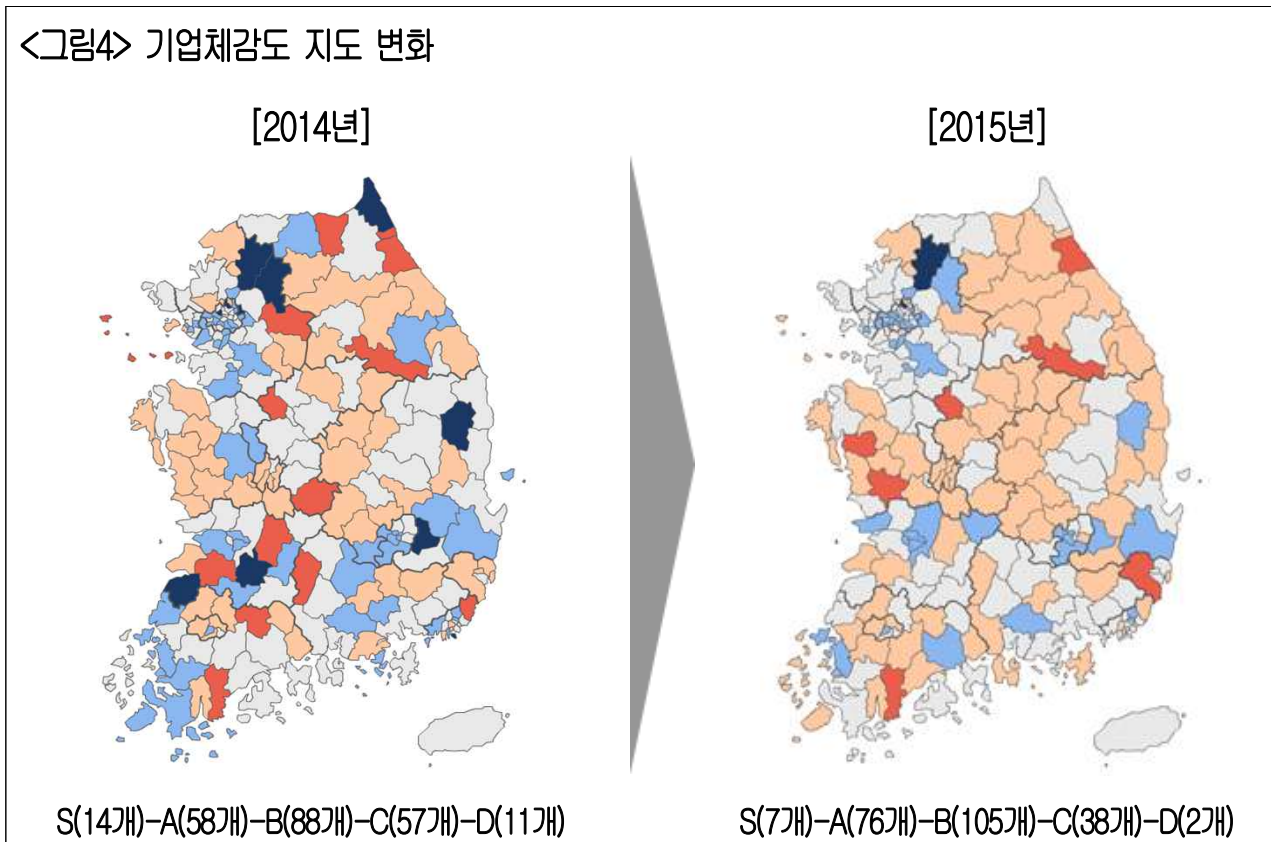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공장설립 친화성 1위를 차지한 강원영월이 올해엔 기업체감도 1위를 차지했으며, 최하위는 서울강북구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한 지자체(125개)가 하락한 지자체(103개)보다 많았다. 특히 지난해 기업체감도 최하위를 기록했던 강원고성이 올해엔 개선도 1위를 차지(228위 → 88위로 140단계, 12.7점 상승)한 반면 전북정읍은 개선도 최하위를 기록했다(3위 → 57위로 54단계, 5.3점 하락)

강원영월이 1위를 차지한 비결은 ‘밀착지원’이었다. 영월은 관내 110여개 기업의 인허가 및 민원 지원에 6명의 공무원을 배정해 전담마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전담공무원이 정해져 있어 점심때나 일과 후에도 휴대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며 “이런게 핫라인이고, 원스톱 서비스”라고 칭찬했다. 기업유치에도 적극적이어서 연구시설과 교육시설 유치를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주민반대가 심한 시멘트공장 증설, 군유림 사용 등을 중재해 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강원고성이 체감도 개선 1위를 차지한 이면에도 ▲‘찾아가는 규제 이동상담센터’ 개설 및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운영 ▲역내기업 40여회 순회방문 및 65건 규제애로 발굴·건의 ▲농공단지입주기업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물류설비 도입비용 50%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인하 및 금액확대(2억원 → 4억원) 등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려는 지자체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

2014년 대비 2015년 기업체감도 변화를 살펴보면 우수지역을 의미하는 S·A등급(주황색)이 72곳에서 83곳으로 11곳 늘어났다. 반면 체감도가 C·D등급인(파란색) 지역은 68곳에서 40곳으로 28곳 줄었다.

<그림4> 기업체감도 지도 변화



■ 경제활동친화성 분석결과

경제활동친화성 1위 전북남원... 개선도 1위 충남부여

올해 경제활동친화성은 평균 73.3점으로 지난해보다 3.5점 올랐으며, 항목별로도 '유치지원(+14.4점)', '행정소송승소율 등(+11.4)'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되었다.

<표3> 부문별 경제활동친화성 변화 (기존분야)

구분	종합평가	항목별 점수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일반음식점	창업지원	유치지원	행정소송승소율 등
2015년	73.3점	74.9점	79.6점	87.1점	76.8점	74.6점	70.4점
2014년	69.8점	70.5점	76.0점	84.4점	67.8점	60.2점	59.0점
증감	+3.5	+4.4	+3.6	+2.7	+9.0	+14.4	+11.4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전북남원이 1위를, 경기과천이 228위를 차지했다. 2014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한 지자체(167개)가 하락한 지자체(61개)보다 많았다. 특히 2014년에 평가했던 6개 항목만 보면 228개 지자체의 점수가 모두 상승해 전국규제지도의 규제개선 유도효과를 분명히 보여줬다. 지난해 최하위였던 충남부여는 올해엔 개선도 1위를 차지(228위 → 18위로 210단계, 24.6점 상승)한 반면 강원정선은 개선도 최하위를 기록했다.(26위 → 219위로 193단계, 10.7점 하락)

전북남원은 다가구주택 건축, 음식점창업, 유통·물류, 공공수주·납품 등 4개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고, 그 외 평가분야에서도 A등급 이상의 우수한 환경을 갖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끝까지 처리하는 ‘규제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역내 곳곳에 ‘규제신고엽서’를 비치하고, ‘규제개선 제안제도’를 운영해 올해 250여건의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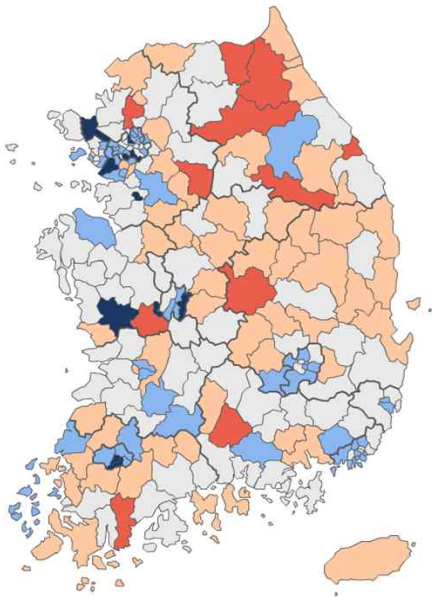
지난해 최하위였던 충남부여가 올해 개선도 1위이자 우수지자체(18위, S등급)로 ‘환골탈태’한 배경에도 420개 조례를 전수조사해 100건을 개선하는 등 강력한 규제 개선의지가 있었다. 부여군은 기업과 공무원을 1:1로 매칭해 관리하는 ‘1사 1분담제’를 운영하고 접수된 건의과제는 끝까지 관리하는 ‘기업애로 전담책임제’도 실시했다. 부여군청 공무원 E씨는 “부여는 천년고도로 도시전체가 문화재여서 ‘규제백화점’이라 불렸다”면서 “규제지도 평가항목에 집중해 규제를 하나하나 풀었더니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2014년 대비 2015년 경제활동친화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업활동에 친화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S·A등급(주황색)인 지역이 68곳에서 110곳으로 42곳 늘어났다. 반면 비친화적인 C·D등급(파란색)은 68곳에서 13곳으로 55곳 줄었다.

김태연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경제활동친화성은 조례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면 바로 등급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작년말 규제지도를 공표한 후 지자체마다 소관규제를 한번에 개선하는 ‘지자체표 규제기요탄’을 시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업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지도작성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지방규제 개선은 자치법규 개정이 수반되는 작업인 만큼 지자체와 지방의회간 협력이 주된 성공요인”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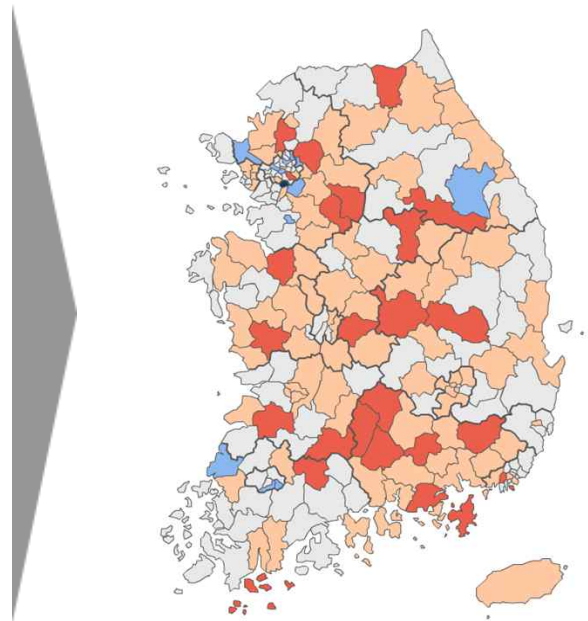
<그림6> 경제활동친화성 지도 변화

[2014년]



S(11개)-A(57개)-B(92개)-C(57개)-D(11개)

[2015년]



S(26개)-A(84개)-B(105개)-C(12개)-D(1개)

■ 경제활동친화성 기준분야(6개)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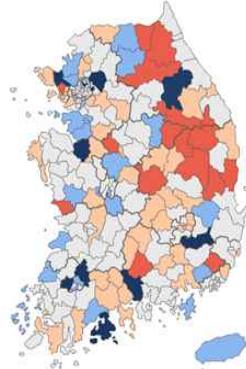
공장설립친화지역 50곳(71→121) 증가.. '강원영월' 공장설립분야 연속1위

공장설립 친화지역은 강원영월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위(94.2점)를 차지한 가운데 친화지역(S·A등급)은 지난해 71곳에서 121곳으로 50곳 확대되었다.

공장설립분야 주요개선내용은 ▲법령상 폐지된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 업종제한'을 조례에서 삭제(8개) ▲경사도나 건폐율·용적률 기준 완화(35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간소화(102개) ▲공장주차장 설치기준 완화(44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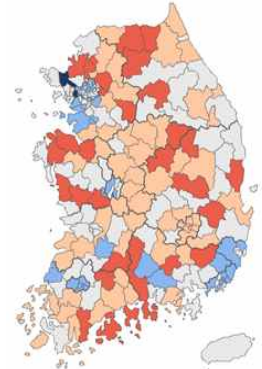
<그림7> 공장설립 지도 변화

[2014년]



* SA등급: 71개

[2015년]



* SA등급: 12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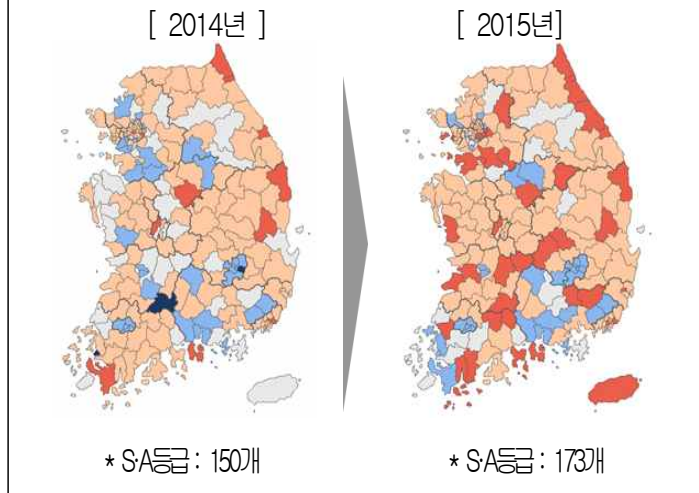
이 결과 공장설립 총인허가기간도 지난해 평균 42일에서 올해는 30일로 단축되었다.

음식점하기 좋은곳 3배로 늘어(14→42)

일반음식점 창업친화도 공동1위 지역은 14곳에서 올해 서울강남, 경북구미 등 42곳으로 3배 증가했고, 친화지역(S, A등급)도 150곳→173곳으로 증가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자연환풍 대신 환기시설을 요구하는 조례 개정(15개) ▲열탕시설 이외의 추가소독설비 의무화 규제완화(20개) ▲테라스영업 탄력허용(24곳→51곳) 등이었다.

<그림8> 일반음식점 창업 지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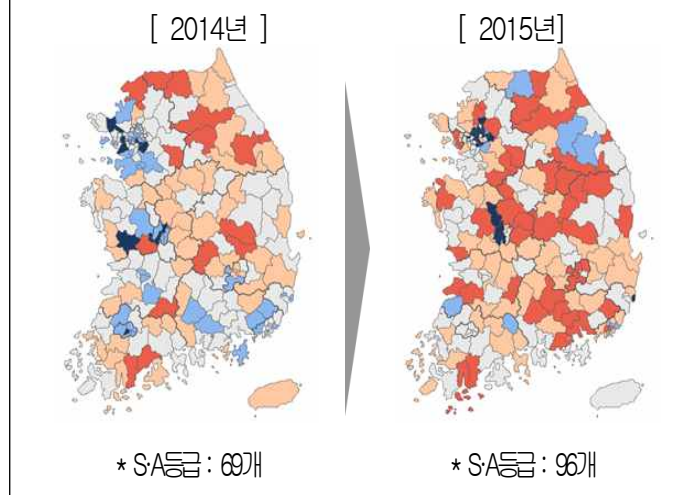


다가구주택 분야 1위지역 2배 증가(16개→33개)... 인허가기간 평균 2일 단축

다가구주택 분야 공동1위지역은 16개에서 올해 경기남양주, 강원춘천 등 33개 지역으로 2배 늘어났고 친화지역(S, A등급) 갯수도 69곳에서 96곳으로 늘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전용주거지역과 상업·공업지역에 대한 다가구주택 입지제한 완화(12개) ▲용적률을 법정최고한도까지 확대(4개) 등으로 그 결과 다가구주택 총인허가기간도 평균 17일에서 15일로 단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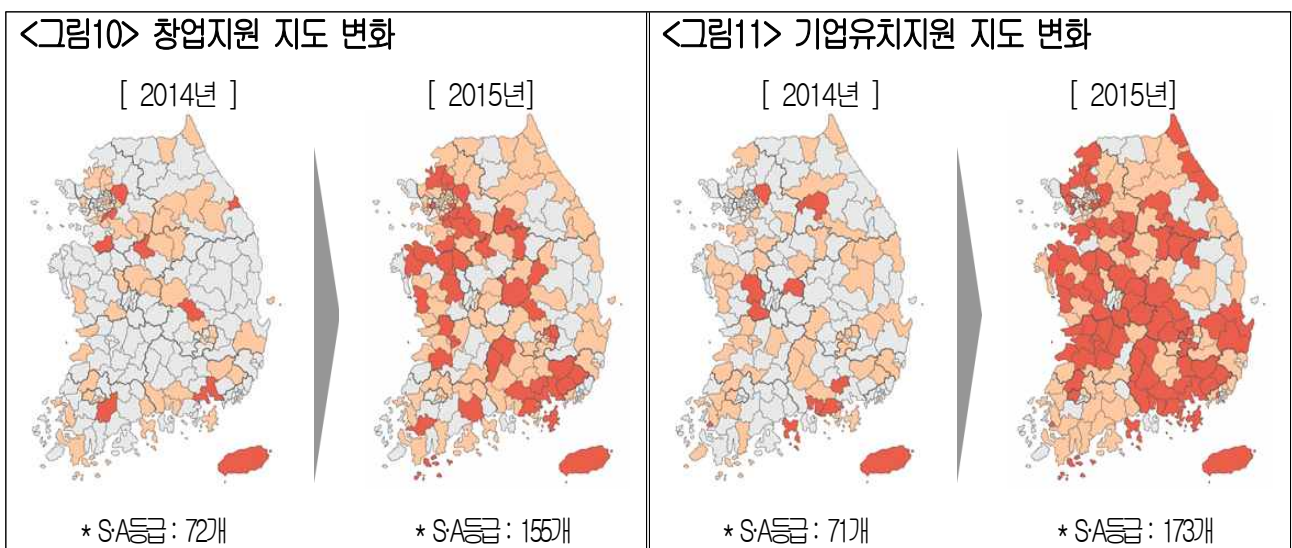
<그림9> 다가구주택신축 지도 변화



창업지원 평균 9.0점, 기업유치지원 평균 14.4점씩 각각 상승

창업지원분야의 경우 우수지역(S·A등급)이 72곳에서 올해 155곳으로 증가한 가운데 ▲창업자금 지원(95곳→170곳) ▲상담·지원센터 운영(108→159곳) ▲교육센터 운영(13→62곳) ▲창업박람회 개최(7곳→38곳) ▲인증·특허 등 기술지원(85→140곳) 등 다수 지자체가 창업지원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치지원 분야도 우수지역(S·A등급)이 71개에서 173개로 늘어난 가운데 ▲조세감면(85개→175개), 보조금 지원(45개↑), 기반시설지원(72개↑), 경영자금지원(70개↑), 행정지원(87개↑) 등 다수 지자체가 기업유치 지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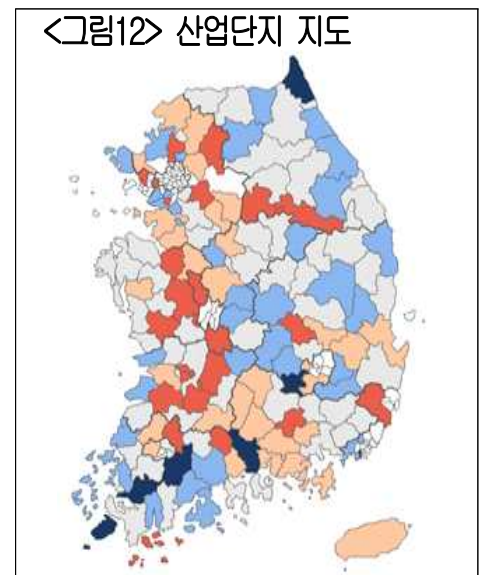


■ 경제활동친화성 신규분야(5개) 종합

산업단지 개발·운영 최적지 : 경기부천, 광주, 가평

산업단지 분야에서는 경기부천, 경기광주, 경기가평(이상 공동1위) 등 55개 지자체가 우수지역(S·A등급) 판정을 받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발주체 제한없음(122곳) ▲건폐율 법정최고한도 적용(115곳) ▲임주자격 제한없음(139곳)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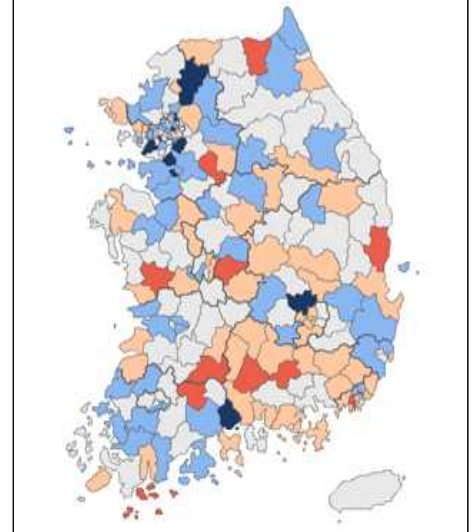
반면 ▲개발비를 입주업체에 전가(25곳) ▲산업용지 처분제한(30곳) ▲용지분할 제한 강화(8곳) 등 산업단지에 비친화적인 지자체도 있었다.

유통점포물류창고 짓기 좋은 지역 : 전북 남원, 경남 의령

유통·물류 분야에서는 전북남원과 경남의령이 공동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이천, 부산서구 등 68개 지자체가 우수지역(S·A등급)인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점포등록시 사전 심의 없음(219곳) ▲창고내 경사도 법정최고한도 적용(202곳) ▲창고 주차장기준 최소화(138곳) 등 친화적인 지자체가 많았지만, ▲점포등록시 추가서류 요구(37곳) ▲인허가 기간 25일 이상(34곳) 등 일부 비친화적인 지자체도 있었다.

<그림13> 유통물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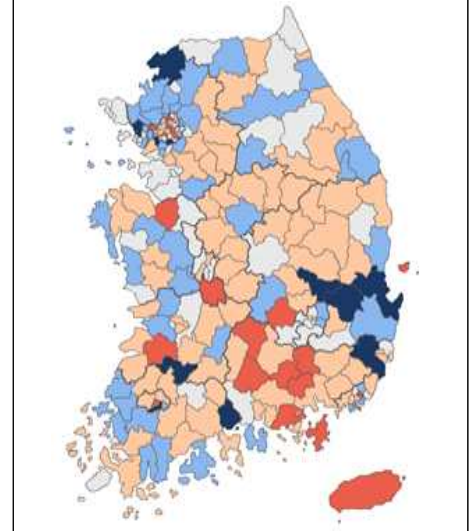


환경규제 합리적인 지역 : 서울 중구, 부산 연제구 등 6곳

환경규제에서는 서울중구, 부산연제구 등 6곳이 공동1위를 차지했으며 충남아산, 경북성주 등 115개 지자체가 우수지역(S·A등급) 판정을 받았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없음(206곳) ▲고체연료 사용허용(152곳) 등의 항목에서는 친화적인 지자체가 많았지만, ▲하수도 사용시 별도 신고요구(202곳) ▲하수도 점용시 관리청허가외 준공검사도 요구(183곳) 등의 항목에서는 비친화적인 지자체가 더 많았다.

<그림14> 환경규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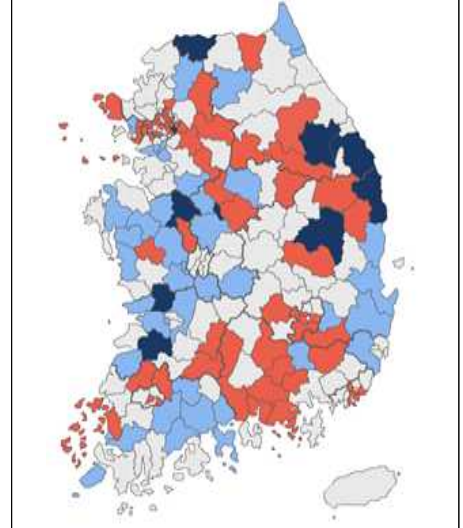


공공수주·납품 공정한 지역 : 전북 남원, 경남 고성 등 76곳

지자체의 조달·구매과정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공공수주·납품 분야에서는 전북남원, 경남고성 등 76개 지자체가 공동1위를 차지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입찰자격 제한없음(200곳) ▲계약정보 공개(193곳) ▲견인대행 업체 차별없음(173곳) 등 많은 지자체들이 친화적인 환경을 갖췄지만, ▲입찰과 무관한 가·별점제 운영(6곳) ▲급수공사시 타지업체 배제(88곳) 등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그림15> 공공수주납품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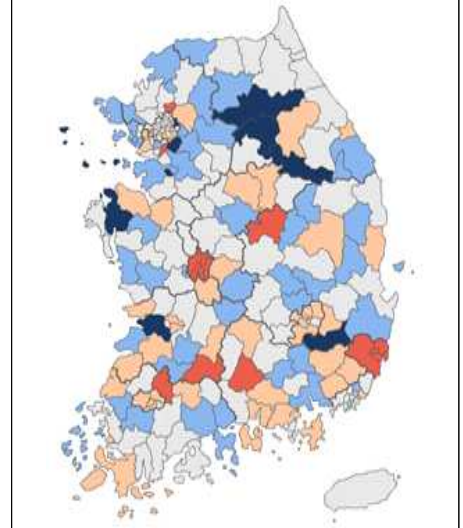


부담금 제도가 기업친화적인 지역... 대전시 대덕, 유성구 등 5곳

부담금 분야에서는 대전대덕, 대전유성이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경북문경, 전북남원 등 71개 지자체가 우수지역(S·A등급)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하수도부담금 감면(173곳) ▲하수도부담금 분할납부 허용(162곳) 등은 기업친화적인 지자체가 많았지만, ▲폐수배출부담금 체납시 증가산 부과(58곳) ▲타지역보다 높은 하수도부담금 부과(35곳) 등 비친화적인 지자체도 있었다.

<그림16> 부담금 지도



조례 등 규정개선에 비해 공무원 행태개선 더더

대한상의회는 “이번에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한 결과 경제활동친화성의 경우 기존 6개 평가분야 우수지역이 68곳 → 110개로 크게 증가한데 비해 기업체감도는 72개 → 83개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전담마크제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결에 더욱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의회가 기업체감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규제애로 사례가 접수되었다.

《지자체 규제애로 사례》

- <#1> A지역은 도시계획조례상 산업단지 건폐율이 ‘80%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A지역에서 실제 적용하는 건폐율은 60%다. 입주기업들은 별다른 근거없이 낮은 수준의 건폐율을 적용하는 이 관행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 <#2> B시는 건축심의 기준상 자연녹지지역의 건물층수를 4층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얼마전 건축업자 C씨는 3층 건물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건물 높이가 너무 높아 미관을 해친다”는 판정을 받았다. C씨는 “심의기준에 없는 건물높이를 문제삼은 것도 황당하지만, 부지 주변에는 높이가 더 높은 건물이 여러곳 있는데 왜 이런 판정이 나온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3> D시는 지방계약법에 1/1,000로 정해진 공사계약의 지체상금을 2.5/1,000로 높여서 적용하고 있다. D시에서 건축업을 하는 E씨는 “법에서 정한 비율을 임의로 높이면 법령위반 아니냐”며 난감해 했다.
-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F씨는 본사를 이전하고 지자체에 허가신청을 냈다가 ‘상근 직원이 없어 허가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장도 차량을 운행하는 운송사업 특성상 상근직원을 채용하기는 무리”라며 “국토부에 문의하니 상근직원이 없는 것은 결격사유가 안된다더라”고 답답해 했다.
- <#5> G지역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H씨는 얼마전 지자체로부터 하수도부담금을 감면받았다.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사정을 알고보니 지자체가 법에서 의무화한 하수도부담금 감면을 뒤늦게 반영한 것이었다. H씨는 “지자체의 늑장으로 지난 몇년동안 필요 이상의 부담금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내년에도 전국규제지도 평가분야를 늘려 향후 ‘전국기업환경지도’로 확대·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에서 산업단지, 유통물류, 공공수주·납품 등 5개 분야를 추가한 것처럼 내년에도 중복 세무조사, 지방소득세율 등 조세정책을 포함한 5개 분야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국규제지도를 통해 지자체별 기업환경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결과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자발적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규제지도상 평가분야가 모두 상향평준화되어 전국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전국규제지도의 세부 평가항목과 지자체별 순위·등급 등의 상세한 자료는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홈페이지(<http://bizmap.korcham.net>)에서 조회할 수 있다. 상의가 주관한 이번 조사 및 분석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의 협력을 받아 이루어졌다. 

2015년 전국규제지도

순위·등급 산정

기업체감도 조사

평가 항목	평가요소
① 규제합리성	1.인허가규제 2.입자개발규제 3.영업활동규제 4.건축물시설규제 5.환경규제 등
② 행정시스템	1.기한준수 2.정보이용성 3.서류간소화 4.종합창구 마련 등
③ 행정행태	1.민원적극해결 2.과도한 자료요구 3.자의적 법령해석 4.과도한 행정지도 5.기부채납 요구 등
④ 공무원태도	1.공정성 2.신속성 3.전문성 4.적극성 등
⑤ 규제개선희지	1.애로해소의지 2.공무원 관리감독 등

경제활동친화성 분석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 항목	평가요소
① 공장설립	1.입지제한 2.경사도 3.건폐율 4.용적률 5.내부협의기간 6.도시계획위원회 7.사전보완요구 8.주차장 설치 9.인허가기간	산업단지	1.개발비부담 전가 2.개발이익률 3.건폐율 4.입주자격 5.계약해지 요건 6.산업용지 처분 7.용지분할 제한 등
② 다가구주택	1.입지제한 2.용적률 3.조경조성 의무 4.건축거리 제한 5.총인허가기간	유통물류	1.점포등록 추가제한 2.점포등록 사전심의 3.임시시장 개설 4.창고내 경사도 5.창고 인허가기간 6.창고간 건축거리 7.창고주차장 기준 등
③ 음식점창업	1.입지제한 2.환기 3.소독 4.테라스영업	환경규제	1.폐기물처리업 제한 2.고체연료 사용제한 3.음식물감량계획 사전요구 4.하수도사용 별도신고 5.하수도 점용허가 등
④ 창업지원	1.창업자금 지원금액 2.상담센터 운영 3.교육센터 운영 4.창업박람회 5.인증·특허출원 지원	공공조수·납품	1.입찰자격 제한 2.계약정보 제한공개 3.업체선정 사전평가 4.견인대행 업체선정 5.급수공사 업체선정 6.업체선정 수수료 등
⑤ 유치지원	1.조세감면 지원 2.보조금 지원 3.기반시설 지원 4.경영자금 지원 5.행정지원	부담금	1.상수도부담금 납부기한 2.상수도부담금 납부방법 3.하수도부담금감면 4.하수도부담금 단가 5.도로복구부담금 선납 6.폐수부담금 중가산 등
⑥ 기타	1.법령개선건의 반영 2.자치법규 개선 3.행정소송 승소율 4.사업자 증가율		

<참고2> 2015 기업체감도 평가결과

(등급내 순서는 점수기준)

평가등급	지자체명
S등급 (7곳)	강원영월군, 울산울주군, 충남부여군, 충남홍성군, 충북진천군, 전남장흥군, 강원양양군
A등급 (76곳)	경남함양군, 충남금산군, 강원홍천군, 강원양구군, 전남나주시, 경남남해군, 충북단양군, 울산동구, 충남보령시, 경북상주시, 강원춘천시, 충남예산군, 충남논산시, 부산기장군, 강원속초시, 충남태안군, 전남광양시, 강원평창군, 대전중구, 경북청송군, 광주북구, 경북청도군, 충남당진시, 강원횡성군, 경북문경시, 경기양평군, 대전유성구, 인천옹진군, 경남거제시, 서울도봉구, 전남장성군, 전북진안군, 전북부안군, 충북충주시, 경남하동군, 충남청양군, 경북영덕군, 전남강진군, 충북영동군, 충남공주시, 강원동해시, 경북성주군, 경북김천시, 대전서구, 경북칠곡군, 강원인제군, 경기연천군, 전남곡성군, 경북예천군, 경북영주시, 강원강릉시, 강원삼척시, 전북정읍시, 서울금천구, 대구수성구, 전남함평군, 전남보성군, 부산사상구, 경남의령군, 대전동구, 경북구미시, 충북괴산군, 경남밀양시, 충북증평군, 경북영천시, 경북울진군, 충북청주시, 경기동두천시, 전남진도군, 전남신안군, 광주광산구, 대전대덕구, 경기과천시, 전남화순군, 충북제천시, 강원대백시
B등급 (105곳)	경북포항시, 충남서산시, 서울광진구, 경남창원시, 강원고성군, 경기광주시, 전남고흥군, 경남함안군, 전북남원시, 광주남구, 울산북구, 충남서천군, 전남영광군, 전남구례군, 경남고성군, 경남산청군, 경북고령군, 충북음성군, 광주동구, 경남사천시, 전남담양군, 전남영암군, 경기안양시, 강원원주시, 서울성동구, 대구동구, 인천계양구, 인천강화군, 경남거창군, 전남여수시, 경기수원시, 경기파주시, 부산연제구, 울산중구, 전북고창군, 부산영도구, 부산북구, 부산부산진구, 전남완도군, 경남합천군, 경기성남시, 서울양천구, 충남아산시, 서울성북구, 강원정선군, 전북장수군, 경기고양시, 강원철원군, 경북안동시, 인천동구, 대구남구, 충북옥천군, 경기양주시, 부산수영구, 경남창녕군, 경기여주시, 부산해운대구, 인천남동구, 인천연수구, 대구중구, 인천서구, 대구북구, 전북김제시, 부산강서구, 경북의성군, 인천중구, 전남해남군, 서울중구, 충북보은군, 부산남구, 서울노원구, 경기평택시, 경기구리시, 부산서구, 충남계룡시, 경기김포시, 경북봉화군, 인천부평구, 경북군위군, 충남천안시, 전북익산시, 서울은평구, 경남김해시, 전북순창군, 부산동구, 서울관악구, 전북임실군, 경기안성시, 경남통영시, 서울종로구, 세종특별자치시, 부산사하구, 제주특별자치도, 경기광명시, 경북울릉군, 경기시흥시, 경기이천시, 서울송파구, 서울동대문구, 경기화성시, 강원화천군, 경남양산시, 경기안산시, 울산남구, 경남양양주시
C등급 (38곳)	전남무안군, 경기의정부시, 서울용산구, 경기오산시, 경북경주시, 전북완주군, 부산중구, 전북무주군, 서울강남구, 전남목포시, 전남순천시, 광주서구, 경북영양군, 대구서구, 경남진주시, 경기의왕시, 경기용인시, 경기가평군, 서울강서구, 서울구로구, 인천남구, 서울영등포구, 전북전주시, 대구달서구, 부산동래구, 부산금정구, 전북군산시, 경기부천시, 서울강동구, 서울마포구, 서울중랑구, 경기하남시, 서울동작구, 서울서초구, 경기군포시, 경북경산시, 서울서대문구, 대구달성군
D등급 (2곳)	경기포천시, 서울강북구

<참고3> 2015 경제활동친화성 평가결과

(등급내 순서는 점수기준)

평가등급	지자체명
S등급 (26곳)	전북남원시, 전남완도군, 경기남양주시, 경기이천시, 경남고성군, 경남밀양시, 경기여주시, 경남 함양군, 경남의령군, 경기양주시, 서울강남구, 경남산청군, 경북의성군, 경남거제시, 전북정읍시, 강원영월군, 강원양구군, 충남부여군, 경북상주시, 경남거창군, 충북제천시, 전남곡성군, 부산 영도구, 부산사상구, 충남아산시, 충북옥천군
A등급 (84곳)	제주특별자치도, 인천부평구, 경남합천군, 강원동해시, 경기광주시, 전남여수시, 경남함안군, 경남창녕군, 충남논산시, 경북영덕군, 전남장흥군, 전북부안군, 강원양양군, 대구달서구, 충남 금산군, 대구달성군, 전북진안군, 충남서천군, 전남담양군, 충남공주시, 전북장수군, 경북구미시, 충남서산시, 충남당진시, 경북문경시, 경북포항시, 경남사천시, 대구북구, 인천남동구, 경남양산 시, 경남창원시, 전북완주군, 충북청주시, 충남청양군, 경기도평택, 부산부산진구, 충북보은군, 경남김해시, 강원횡성군, 충남천안시, 경남통영시, 충북단양군, 대구서구, 대구남구, 경기양평 군, 경북봉화군, 대전대덕구, 강원태백시, 충북음성군, 경기동두천시, 대전동구, 충북괴산군, 강원인제군, 서울중구, 대구동구, 충북영동군, 경기용인시, 경기파주시, 경북성주군, 경남남해 군, 전남함평군, 경남진주시, 경북영주시, 전북전주시, 경북예천군, 전남강진군, 경북영천시, 경기하남시, 부산남구, 경기의왕시, 충남보령시, 경남하동군, 부산강서구, 서울관악구, 경기고 양시, 울산중구, 강원춘천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안성시, 인천계양구, 강원강릉시, 인천서구, 서울송파구, 강원속초시
B등급 (105곳)	울산남구, 경기화성시, 전북임실군, 경기평택시, 전북김제시, 부산동래구, 충남홍성군, 서울영등포구, 충남태안군, 인천중구, 강원고성군, 부산기장군, 충북증평군, 서울강서구, 충북진천군, 강원원주시, 인천남구, 전남순천시, 광주광산구, 전북고창군, 인천동구, 울산북구, 경북경산시, 부산해운대구, 인천강화군, 서울강동구, 전남구례군, 전북순창군, 경북김천시, 광주서구, 경북울진군, 전남해남군, 전북익산시, 전남목포시, 경북칠곡군, 전남장성군, 전남고흥군, 충북충주시, 서울금천구, 부산 수영구, 강원철원군, 울산동구, 강원홍천군, 경북군위군, 전남신안군, 서울서초구, 부산서구, 부산중구, 대구중구, 서울동작구, 서울도봉구, 경기포천시, 인천연수구, 서울성동구, 인천옹진군, 대구수성구, 강원평창군, 부산연제구, 경북안동시, 충남예산군, 전남무안군, 경기부천시, 충남 계룡시, 광주북구, 강원삼척시, 전북무주군, 전북군산시, 부산사하구, 경기연천군, 강원화천군, 경북청송군, 서울강북구, 경북청도군, 전남광양시, 울산울주군, 전남진도군, 경기광명시, 서울 구로구, 경기수원시, 대전서구, 전남영암군, 전남나주시, 경기시흥시, 전남화순군, 경북울릉군, 경기안양시, 전남보성군, 경북경주시, 경북영양군, 서울서대문구, 대전유성구, 경기의정부시, 경기군포시, 서울광진구, 서울은평구, 부산금정구, 서울중랑구, 대전중구, 경기안산시, 서울양천구, 서울동대문구, 부산북구, 서울종로구, 경북고령군, 부산동구
C등급 (12곳)	경기김포시, 경기오산시, 광주동구, 강원정선군, 서울용산구, 경기성남시, 전남영광군, 서울마포구, 경기구리시, 서울성북구, 광주남구, 서울노원구
D등급 (1곳)	경기과천시